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4-4호

발행일: 2024. 2. 15. (목)

제412회 국회(임시회, 2024. 1. 15. ~ 2024. 2. 8.)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메타버스 산업의 진흥 및 육성
- 나.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및 규제 완화
- 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방지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12회 국회(임시회)는 2024년 1월 15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 25일간 진행되었으며, 지난 2월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47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가상융합(메타버스) 산업 진흥과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법률안,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3) 첨단재생의료기술을 이용한 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12회 국회의 2024년 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47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정무위원회(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6	교육위원회(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등 10인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0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의원 등 10인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2	국방위원회(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등 11인
13	행정안전위원회(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의원 등 12인
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9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0인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0인
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등 10인
2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등 10인
2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등 10인
2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등 10인
26	보건복지위원회(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3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등 10인
3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등 10인
3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등 17인
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등 14인
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의원 등 11인
36	환경노동위원회(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3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 의원 등 10인
3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등 11인
39	국토교통위원회(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4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4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 의원 등 10인
4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
4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의원 등 10인
4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0인
4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김윤덕 의원 등 20인
47	정치개혁 특별위원회(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메타버스 산업의 진흥 및 육성,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및 규제 완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방지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메타버스 산업의 진흥 및 육성

개요

메타버스(가상융합세계)는 게임, 소셜미디어에서 시작하여 전시, 컨벤션, 원격근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융합기술은 주요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활동 공간을 확장하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마케팅, 공연 등에도 활용되며, 메타버스 커머스, 메타버스 공연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융합 생태계는 디지털라이프 플랫폼 구축과 국민 생활 전반의 비대면 촉진을 통해 메타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융합기술(XR) 시장은 2019년 78.9억 달러에서 2024년 1,368억 달러로 5년간 연평균 76.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국내 가상융합기술 시장규모는 2019년 5.9억 달러에서 2024년 26.3억 달러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융합기술을 응용한 시장규모는 2023년 1,210억 달러로서 2019년의 90억 달러와 비교하면 1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회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메타버스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해 선제적인 입법에 나섰습니다. 이는 또한 [입법정책브리핑 제2023-7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제2023-11호 국가전략기술 지원·육성 III](#) 이슈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1일 본회의에서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한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 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과 관련된 가상융합산업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상융합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024-02-01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과기정통부)

과제목표

미디어에 대한 낮은 규제 개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주요 내용

(미디어 미래전략 및 추진체계)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 추진, 新·舊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 마련

*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낮은 규제 개선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OTT 제도적 기반 마련(세액공제·자체등급제 등) 및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의 동반 해외진출 종합 지원

- OTT 등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

(ICT기반 콘텐츠 제작혁신) 민관 투자확대 및 기술융합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 및 콘텐츠 제작·유통과정(촬영·편집유통·현지화 재제작)에 ICT 적용 등 제작생태계 혁신

(미디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미디어 분야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디지털 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 1인 창작자 성장단계별 지원 및 미디어 분야 전주기 인력 육성(예비인력·재직자)

-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장비·디바이스 등 전·후방 산업 육성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방송산업의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중소·지역방송의 규제완화 및 콘텐츠 제작 지원·인프라 마련

[120대 국정과제]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과제목표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

주요 내용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 육성 추진('22~)

-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슈퍼컴 도입, '23~)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쏠 분야에 AI 전면 적용('22~)을 통해 AI 융합 확산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를 확립('22년)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23~'24)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클라우드·SW 육성)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형 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22~) 등 추진

(한계돌파 新기술 확보)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기술 축적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핵심전략분야에 선택·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 선도('22~)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22~)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22년)

※ 범부처·민간과 함께하는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

2023 정부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12. 28.)

3.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 양자 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 기술 등의 중점 육성 및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딥사이언스 창업과 스케일업 활성화 병행

최신기술 분야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먹거리화 지원

- (양자) 관련기술 법령 제정 추진, 양자기술 전략로드맵에 따른 맞춤형 기술개발(양자컴퓨팅·통신·센싱 등 '23년 984억원)
- (첨단바이오) 생산성을 향상시킬 디지털 융합형 인프라* 핵심기술** 확보, 의과학자 양성(미래의료연구센터 선정) 및 신종감염병 선제적 대응
* 바이오파운드리,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 등 / ** 유전자 편집·제어, 줄기세포 등
- (탄소중립) 안전성·경제성 우수 혁신형 SMR 개발('23년 31억원), 탄소포집(CCUS) 원천기술 개발('23년 1,197억원) 등 추진
- (6G) 기초연구와 함께 상용화·소부장·표준 기술 병행개발*, 자율주행·UAM 육성 위한 주파수 공급체계 마련('23.1.)
* 체계적·종합적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타 사업 기획·시행 추진
- (메타버스·블록체인) 메타버스 플랫폼 실증('23년 883억원), 실감콘텐츠 기술 개발('23년 330억원), 국민체감 블록체인 프로젝트('23년 234억원)
* 온라인 주민투표,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등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석 의원안: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2022. 3.

[허은아 의원안: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2022. 11.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 3.

조승래 의원안: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 메타버스 산업 기반법 제정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20220330\)](#)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칼럼

[문재인정부 국정백서\(미래3_제21권 미래를 위한 결단,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메타버스\(metaverse\)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1. 7. 28.

메타버스는 현실을 모방한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소통하고 공동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모색,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현실사회 규범과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

[메타버스\(Metaverse\)산업 관련 해외 규제동향 조사·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1-21-6 2021. 10. 29.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XR 등 가상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기술 산업의 성장 확산으로 차세대 가상공간 플랫폼인 메타버스 부상
- 글로벌 ICT 기업들이 XR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국은 메타버스 기반 기술의 잠재력과 파급효과에 주목하며, 메타버스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
-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는 콘텐츠 체험 중심으로 경제적·산업적 지원에 한정, 법제도 마련 미비
-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메타버스 경험을 설계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콘텐츠와 관련한 규제 개선 등 국내 메타버스 관련 제도 정비가 필수
- 이에 해외 주요국의 메타버스 산업 관련 정책 및 법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 가능한 선진 사례를 도출하고, 국내 제도정비의 방향성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메타버스 가상세계 생태계의 진화전망과 혁신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2021. 12. 22.

최근 온라인 가상공간과 현실이 융합한 ‘가상공존세계(virtual shared space)’를 의미하는 ‘메타버스(Metaverse)’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이 중 메타버스 가상세계는 AR·VR 기술뿐만 아니라 AI, 5G, 클라우드 등의 범용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는 중이다. 특히, 주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치중되어 있던 서비스가 코로나 19 이후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메타버스에서의 활동은 놀이와 여가로서의 의미를 넘어 현실의 수익과 경제적 가치 창출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메타(구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자신이 주도하는 플랫폼 안에서 사용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인프라와 콘텐츠를 강화하고 연계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이다. 본 연구는 기술구현의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가가치의 확장성을 반영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인프라-플랫폼-콘텐츠·IP’의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생태계 분석틀을 제안한다. 나아가 원격경제의 진화적 관점에서 데이터 활용 및 플랫폼의 발전 수준의 두 축으로 본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의 진화 수준과 전망을 진단한다. 이를 토대로 메타버스 산업에서 국내 기업이 취할 전략적 선택지와 혁신 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현재 세계시장에서 인프라,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에 맞서 콘텐츠/IP 분야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혁신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및 규제 완화

개요

바이오헬스 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건강 수요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정밀의료와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 발전으로 의료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 병원 시스템 등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요 산업 분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하여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5대 수출 주력산업 육성, 신규 일자리 30만 개 창출 비전을 제시하고, 2020년 11월에는 '바이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 기반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생산 투자의 성공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화와 시장진출 촉진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최근 국회도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 처리 지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해 관련 산업 분야의 지

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입법정책브리핑 제2023-7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제2023-11호 국가전략기술 지원·육성 III](#) 이슈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1일 본회의에서는 첨단재생의료기술을 이용한 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보건복지위원회	<p>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금지되어 있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약하고, 일본 등 해외로의 원정치료가 발생하며, 첨단재생의료기술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첨단재생의료치료는 그 안전성을 평가하기가 어렵고 이를 허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본 대안은 동 법 제정 3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법집행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되 치료 대상자 및 위험도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적절한 치료비용이 청구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사전심의 등 규율체계를 갖추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p>	2024-02-01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과제목표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과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

주요 내용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한국형 Arpa-H)

- 팬데믹 발생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및 관련 법률 제정 추진

- (글로벌 허브) WHO 바이오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
- (제약 바이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재생의료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R&D 및 임상연구 등 지원 강화, 공적 임상연구 확대
- (디지털 헬스) 국민 개개인인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
 -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빅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
-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하여 규제예측성을 높이고 쏠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성공률 제고
 - * 사전상담·임상시험설계·신속심사 등 종합지원, 바이오·디지털헬스맞춤 규제 재설계
- (품질·생산 지속혁신)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성능 환류체계 확립,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 등 국가공급기반 확충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 6. 16.)

- **(유망 신산업 육성)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차세대 AI, 데이터로 이어지는 디지털 초일류 기반 조성
 - * (AI 초거대 AI 모델 활용 지원(’22.6월~), 재난안전·환경분야 AI 선도과제 추진(’22.5월) (AI 반도체)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NPU Farm) 구축 및 실증(’25년) (데이터) 범정부 데이터산업 진흥 제1차 기본계획 수립(~’22.12월)
 - 바이오, 자율차, 스마트물류 등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 (지능형바이오) 빅데이터·AI 기반의 바이오 제조공정 혁신센터 구축(~’25년) (자율차) 핵심 첨단인프라(C-ITS,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27년) (물류)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22.10월),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26년)
 - 우주, 로봇, 나노 등 미래유망 산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22년말~’23년)
 - 정책금융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K-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
 - * (정책금융)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대상 정책금융 투자 (해외진출)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해외진출 활성화 등
 - 데이터 활용,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농업 확산·고도화
 - *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2.下),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가동 등

출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 12. 21.)

③ [新시장 :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전략 분야 육성을 위한 新산업
전략 추진 → 초격차 확보 · 신격차 창출로 글로벌 신시장 선점

▶ 전략산업 No.1 달성	반도체 산단 신규 입지 확보 추진('23~), 국가전략기술(조특법)에 디스플레이 포함('23) 등
▶ 바이오 혁신	K-바이오 랩허브 조성('25),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32) 등
▶ K-컬처 융합관광	청와대 일대 관광클러스터 구축('27), '한국형 칸쿤' 5개소 조성('30) 등
▶ 한국의 디즈니 육성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25), 메타버스·확장현실 기술개발('23~) 등
▶ 빅딜 수주 릴레이	해외건설·방산·원전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릴레이 수주

출처: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 12. 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1 과학기술 · 첨단산업 육성

◇ 자율과 창의 기반의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을 미래 성장동력 발굴 지원 강화

① R&D 지원 방식 개편 및 인재양성 강화 등으로 과학기술 도약 지원

- (R&D 지원혁신)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 추진
 - 책임 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해 성공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한계도전형 R&D 시범과제 착수('23.10)
 - 대규모 R&D 절차·제도를 개선*하여 재정지원 효과성 제고
 - 다부처 R&D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 계획 하에 투자규모 조정, 1억 이상 국가 연구시설·장비 심의기간 단축 등

출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 1. 4.)

- (산업육성) 서비스 TF 중심으로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푸드산업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마련('24.1)
 - (청년친화) 웹 기반 창작서비스, 웨딩, 이·미용 등 생활밀접 및 취·창업 선호도가 높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마련*
 - * 2030 자문단과의 협업을 통해 세부 서비스 분야 선정 및 체감도 높은 과제 발굴

- (콘텐츠) 정책금융 우대보증지원을 추진하고, 국내 OTT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24.1/4), 제작사 IP 확보방안 마련
 - *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보증(기보) 지원 대상에 영상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추가
- (MICE) 「MICE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24.1),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경단너 등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계약제도 개선 추진
-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첨단재생의료·의료 AI 등 융복합 기술 육성전략 수립
 - * (예) 병원 진료정보를 개인 동의하에 플랫폼 기업에 직접 전송 +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마이데이터 활용에 따른 효용성 검증
- (푸드) K-미식벨트 조성으로 미식 관광을 활성화하고, 향토음식 발전과 산업화 지원을 위한 ‘향토음식 진흥센터’ 설립 추진

출처: [2024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22. 8. 19.)

6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 감염병 위기 상시화, 글로벌 저성장 등 대응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주목
⇒ 보건안보 확립, 미래먹거리·일자리 확보를 위해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Next 반도체”)

1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기술확보 집중 지원

- (핵심기술)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6개社)과 팬데믹 가능성 높은 감염병(코로나, 메르스 등) 대상 백신 후보물질 우선 개발, 지원
 - * 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 확보 집중 지원
- (연구개발) 보건안보·국가난제 해결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25.1조 원 목표)

2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 산업 활력 제고

- (투자 확대) 국내(~26년, 13조원) 및 해외기업의 투자유도,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22~) 등 민관 투자 확대
- (규제 개선)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22) 신속 추진,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로드맵(22.10) 발표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소

3 쌓여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 강화

- (빅데이터) 첨단 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100만명 데이터 축적 목표, 29억 원 예정)
- (마이데이터)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하여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마련(23년 초 개통)

4 글로벌 협력을 통한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도약

- 인력양성 허브(WHO 지정) 운영, 세계 바이오 서밋(22) 개최, 게이트웨이단 감염병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 정부 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23. 1. 9.)

5)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지원

* 생산 10억 원 증가 고용효과 : 바이오헬스 16.7명 > 전 산업 평균 7.4명

○ (육성)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인재양성) 생산·연구인력 11만 명(’27) 육성방안 수립 (’23.상)
- (글로벌연계) 중·저소득국 대상 WHO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백신·원부자재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 (’22) 43개 중저소득국 492명 WHO, ADB 협력 교육 → (’23) IDB, 게이츠 재단으로 확대
- (규제혁신)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선진입·후평가 추진, 첨단재생의료 치료기회 확대·상용화 촉진
*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뇌기계 인터페이스, 유전자검사, 인프라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 수립 (‘바이오헬스규제혁신로드맵, ’23.상)
- (거버넌스)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구성 추진

○ (수출) 바이오헬스 수출 전략적 지원

* ’17년 125억 달러(전체산업 중 12위) →’21년 254억 달러(7위) 달성, ’17-’21 연평균 19.5% 성장

- (민관투자) 제약 38조(25조, ’27), 의료기기 1.6조 원(10조, ’27) 등 R&D 확대, K-바이오 백신 펀드 본격투자(5천억) 및 추가 펀드조성 (누적 1조 원, ’25)
- (맞춤지원) 주요국 인허가·규제 강화 및 자국 보호조치 적극 대응,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지역별 전략적 지원

의약품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상호 규제협정 등 G2G 파트너십 강화 ▶제약바이오 수출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글로벌 제약전문가 컨설팅 확대
의료기기	▶유럽 인허가(MDR) 강화에 대응해 유관기관 메드텍 수출지원 TF 운영을 통한 국제인증 지원 ▶아시아, 북미 등 권역별 수출지원 로드맵 수립, 아세안(베트남, 인니) 현지 거점운영
화장품	▶수출 국가 다변화를 위한 수출상담 및 홍보지원 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중국 인허가규제 강화(’24.5 예정) 대응 자료제공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 (종합계획)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2개, ’27), 의료기기 수출 목표 (5위, ’27) 달성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제약바이오계획’, ‘의료기기계획’, ’23.1)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안: [첨단재생의료 및 임상연구 제도 현황 등](#) 2023. 9.

이용우 의원안: [주요 내용별 검토 등](#) 2023. 9.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과 글로벌화](#)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바이오헬스 6대 강국 실현...5년 내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美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관련 법률 제정의 의미](#)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2019. 9. 11.

2016년 12월 13일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이하, 'Cures Act')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 제품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의료 제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Cures Act는 환자 중심의 의료 제품 개발을 비롯하여 정밀의학 연구, 첨단재생의료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승인 허용 및 가이드라인 개발,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우선 검토 프로그램 시행 등 혁신적 치료법을 장려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Cures Act 제정이 미국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 첨단바이오 제약산업 관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1-03 2021. 10. 31.

연구의 목적

- 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생명공학 분야의 법제도적 미비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과학·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산업·주요 국내 정책 동향 검토하고 생명공학 분야의 국내 법제의 제정 배경 및 개정 연혁 등을 분석하여 생명공학 규율의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음
-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과잉규제·중복규제·규제공백 등의 규제법 차원에서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바이오산업의 혁신촉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요소들을 발굴하고 국내외 생명공학 분야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제도나 규정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규제법적 분석·연구를 수행함

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방지

개요

통계청 통계개발원 등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2006년 보이스피싱의 최초 발생 이후 2019년 3만 7,667건으로 최대, 2021년까지 누적 피해 금액은 3조 8,681억 원, 2021년 1건당 피해 금액은 2,5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메신저피싱은 2021년 1만 7,841건 발생, 피해 금액은 1,265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 12월 현재 최근 4년 평균 검거 인원(3만 8,015명) 중 총책, 텔레마케터 등 '조직상선'의 검거율은 2.0%로 낮고, 검거되는 대다수는 20대의 '현금인출·전달책'으로서 42.3%(1만 2,262명)를 차지하며, 이들은 쉬운 일로 고액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기 방조범으로 이용당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 교육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하여 불법 사금융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통장협박 피해를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처벌 등을 위한 입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정책브리핑 제2024-3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II](#) 이슈 등 참조).

2024년 2월 1일 본회의에서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의심되는 거래계좌를 상시 점검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와 정보를 공유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에 마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전부 지급정지를 약용한 통장협박이 발생하고 있고, 페이서비스 등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금융업자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피해구제가 곤란하며,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처가 분산되어 있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2024-02-01 (원안가결)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 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금융위)	[120대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여가부·금융위)
과제목표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	과제목표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홍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주요 내용

(예대금리 공시 개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도 단축(3개월 → 1개월)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 추진
(간편결제수수료)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 추진

(모바일 OTP 확산) 쏘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모바일 OTP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모바일 OTP 도입을 유도

(금융분쟁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Fast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 단축

(펫보험)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주요 내용

(규제혁신)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혁신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구제책 마련)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 개선 검토,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 적극 대응 및 피해자 구제 강화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부처 간 협업으로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응,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 추진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 **(경제법치)** 경제 전반에 법에 근거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 (금융거래) 가상자산·증권시장 불법거래를 근절¹⁾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예방, 피해보호 강화²⁾ 추진
 - 1)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미신고 사업자 적발·단속 강화, 주가조작 제재 강화 등
 - 2) 불법사금융 광고자단,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및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방안 마련 등
 - (노사·기업)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을 강화¹⁾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구제수단 강화²⁾
 - 1) 공정채용법 입법, 채용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채용 금지제재,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등 근로기준법 개정,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확대강화
 - 2)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 요구권의 명확한 내용 규정
 - (국고·공공)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및 부정수급 점검 강화¹⁾, 공공조달 분야 경쟁제한 요소개선²⁾, 역외탈세 엄정 대응 등 추진
 - 1) 보조금법 정비: 외부 회계감사 대상: 10억원 → 3억원 이상 등
 - 2) 입찰담합 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발주시 단독규격 지정 등 입찰담합 유발 행위 개선
 - (국민안전) 마약밀수 근절을 위해 단속 인프라(인력·조직·장비 등)를 확충하고 주요국과 국제공조(태국·아세안 등) 강화

출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3 정부 업무보고(금융위원회, 2023. 1. 30.)

8.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 조직적 보험사기 예방방안 마련, 전환사채 이용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 불법·불건전 영업을 사전차단하고 사후 제재·처벌 강화
 - ① 신·변종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사기이용계정 지급정지*, 통장협박**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 * 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자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절차 적용 등
 - **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
 - ②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신속한 차단*으로 서민피해 예방
 - * 정부검찰 등 외 인터넷진흥원·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도 전화번호 차단 요청 허용
 - ③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속한 제도화 추진(*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④ 강력보험범죄, 조직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인수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추진
 - * 소득대비 과도한 보험가입시 재정심사 강화 등
 - ⑤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무자본 M&A 등)에 대한 대응 강화
 - * 전환사채 발행·유통시 공시의무 강화 등 투자자 보호방안 강구
 - ⑥ 불법 주식리딩방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정비*(자본시장법, 개정)
 - * (1) SNS·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 금지
 - (2)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광고규제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 불법사금융 및 금융범죄에 대한 당국의 대응역량 강화
 - ① 불법사금융 및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금융당국 수사기관간 공조강화*
 - * 불법사금융 적절 TF, 불법사금융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및 수사·단속 적극 지원
 - ②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및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 ③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 금융회사-금융정보분석원간 정보교류 확대 등 추진
 - * (1)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를 준법감시인과 구분하여 별도 지정, 역할 강화
 - (2)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적절성이 중점 반영되도록 자금세탁방지 활동 평가기준 개선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안: [금융거래목적 확인 법적근거 명확화](#) 2020. 11.

송옥주 의원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관한 정보 공유 등](#) 2021. 6.

김병욱 의원안: [피해의심거래계좌 발견을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적인 자체점검 등](#) 2022. 5.

박재호 의원안: [사기이용계좌 일부지급정지 도입 등](#) 2023. 6.

황희 의원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근거 마련](#) 2023.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2022. 9.

양정숙 의원안 등: 유사수신행위에 가상자산 관련 행위 포함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방안 : 2023년도 보이스피싱 안전망 구축 공동포럼](#)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한국의 사회동향 20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최근 개정내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2023. 7. 28.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5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바, 피해자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① 신종 보이스피싱 대응, ② 신속한 지급정지를 위한 절차개선, ③ 보이스피싱 경각심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17-18-4 2017. 8. 31.

▶ 가상통화의 문제점

- 우리나라도 코빗, 빗썸, 코인테스트 등 비트코인 관련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투자사기, 조세회피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가상통화의 이용 증가(전 세계적으로 약 700개 유통 중)에 따라 해킹 등 불법행위 대가로 가상통화를 요구하거나, 유사 비트코인 발행으로 투자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발생
 -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가상통화를 통한 건전·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